

데스크 시각

이제는 김영란법과 친해질 때



채희중 사회2부장

있을 것 같다.

그 말 많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9월28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왔다. 법률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자영업계와 농·수·축산계의 피해 완화를 위해 논의됐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격 기준 상향 요청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이미 동의 절차 마친 법률

나라가 온통 '영란이 배우기' 모드로 들어갔다. 새로 생긴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열공' 중이다. 직접적인 법적 대상자가 4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이번엔 시행되는 법을 숙지해야만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3·5·10만 원이 상한선이다. 애초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공직 부패 척결이었던 만큼 예상과 달리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필자(기자)는 공직자들보

다 할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정년도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사업 인허가권도 없고, 연금도 받지 않는 데 공직자와 같은 취급이라니... (솔직히 약간 억울하기도 하다) 지금도 기자 개개인은 물론이고 매체를 사이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이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기사나 사실들은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 양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까지 들먹인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영란법과 친해져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사실 이 말도 그가 한 말은 아니라는 게 정설임)라는 명언은 인용 의도와 달리 '잘못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와 제자들은 그가 부당하게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투옥돼 있는 동안 죽마고우 '크리톤'은 감옥에 면회를 가서, 모든 조치를 마쳤으니 탈옥하자고 권유한다.

이 때 소크라테스는 "나는 하루를 살아도 올바르게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성

인이 된 후 아테네의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다. 내가 동의했던 법을 따라 지켰다"고 말했다. 결국 그가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한 것은 '무조건 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동의한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선의의 피해 최소화해야

어떤 법이든 국민의 동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은 이미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한 데다 현재의 합헌 결정이 나면서 동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물론 처음 접하는 법이니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법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 새로운 제도로 인한 불편을 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김영란법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제 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할 때이다. '3·5·10' 상한선에 따른 자영업자와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있는지 살피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충격파를 줄이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chae@kwangju.co.kr

社說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피해 줄일 대책 급하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음식물(식사 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가격 기준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던 농축수산물 업계의 규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됐다.

정부는 엇그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이 애초 규정한 식사비 등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장기정책관 등도 참석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울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관련 규제를 3년간 늦추자며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끈다. 법안은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 가격

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농축수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 주기가 길고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의 설득력은 충분해 보인다. 김영란법이 본격화되면 음식물이나 공산품 등은 매뉴와 구성물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바꿔 대응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는 상한 가격을 넘기지 않고 품목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탁·비리 등이 줄어가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각별하고 시행 시기도 임박한 터라 가격 제한을 쉽사리 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볼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분야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학길 불법 주정차 자치구서 적극 대응을

광주 시내 곳곳에서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학생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5개 자치구가 견인 등의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 소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상정체 구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에 버섯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기껏해야 4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에 그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는 물론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광주시 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견인 실적은 총 2만 6064건이었다. 이후 매년 견인 실적이 줄어들다가 지난해엔 361건에 불과했다. 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31만 1513건, 2015년 44만 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 패턴의 변

화는 지난 2012년 이후 각 자치구가 견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직영화 하면서부터다. 이후 각 자치구는 시민들로부터 '원성도 사고, 절차도 복잡'한 견인보다는 손쉬운 과태료 통지서 발부를 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편주의의 단속으로 인해 영·유아를 둔 부모나 학부모, 운전자 사이에 불만과 격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학 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원칙적으로 견인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악사 사라질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 송충이 트릴 것이 분명하다.

물론 과거처럼 시민들의 커다란 불편과 원성을 사는 마구잡이 견인은 자제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 5개 자치구는 상습 정체구간 등 꼭 견인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로 끝내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

GMO재앙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의병운동

(유전자변형식품)



류동훈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문위원

상을 치우라'(김은진 저), 이 세권을 읽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들어왔다.

이 책들에서는 GMO 유전자 조작식품들의 변질된 단백질로 인해 초래될 예상치 못한 질병들,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물질의 제조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도중중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만들었던 '몬산토'라는 회사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 독성이 들어간 제조제를 개발하였다.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들어간 연못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채취하고 이 박테리아에서 DNA를 추출하여 콩과 옥수수 유전자에 투입하여 변종 콩과 옥수수를 개발하게 된다. 이 콩과 옥수수는 글리포세이트 제조제에 강한 생존력을 가지게 되어서 헬기로 제조제를 무작위로 뿌려도 잡초만 죽고 콩과 옥수수는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되어 낮은 가격의 곡물이 생산될 수 있다.

몬산토 회사는 이 글리포세이트를 더 많이 독점적으로 팔기 위해 GMO 종자를 확대보급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제조제와 종자를 셋트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조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 잡초가 생겨나게 되고, 다시

이 슈퍼잡초를 잡기 위해 더 강한 독성을 지닌 제조제가 계속 개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양은 점점 초도화된다. 이 콩과 옥수수로 식용유를 만들고 과자에 넣는 과당을 만든다.

더 나아가 종자 다국적 기업들은 스스로 종자를 번식하지 못하는 '터미네이터 종자'도 개발한다. 종자를 계속 팔기 위해 작물의 씨앗이 후손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식물 이후손을 이어갈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또, 벌레가 먹으면 벌레의 내장이 녹아버리는 종자도 개발했다. 벌레가 안 생겨 키우기 좋은 것이다. 그런데, 벌레 내장이 녹아버리는 농작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 속의 이로운 미생물들을 죽여 버린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GMO농산물을 사료로만 쓰고, 타기,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잠비아, 케냐 등도 기근으로 인한 무상 원조 GMO농산물을 거부하고 있고, 중국은 육군식량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MO농산물을 지난해 1000여만톤 수입하고 있으며, 식용 GMO수입 세계1위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먹거리가 GMO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표시에 관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금년 7월29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 소와 돼지의 유전자가 혼합되어 변형된 '소돼지'라는 동물이 있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식물도 마찬가지다.

GMO 식품과 가공품들은 표시제를 엄격하게 하고, GMO 퇴출을 위한 소비자 운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로컬푸드를 육성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도시민과 우리 지역 농민들이 함께 지켜야 한다. GMO위기는 한민족을 재앙으로 이끈 임진왜란이나 일제 식민지 상황과 흡사하다.

필자는 금년7월17일부터 생전 안쓰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면서 치밀하게 준비 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기를 쓴다. 귀여운 말들이 나중에 기행어를 넣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우리는 GMO 퇴출을 위한 의병을 농촌과 도시에서 동시에 육성하여,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임미숙 에덴지역아동센터장

교감 선생님은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차례 아이 아버지에게 담임 교사가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방법을 생각하던 중 아동센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다.

이 아이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제가 그런 아이를 돌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사회복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 드셨다.

강 교감 선생님은 전화통화 후 바로 아이와 할머니를 모시고 아동센터를 방문하셨다. 7자로 굽은 허리를 펴지지 못해 유도차를 자가용 삼아 다니시는 할머니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전형적인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증세를 보이는 아이였다. 강 교감 선생님께서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하시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렵פות이 겁이 잡혔다.

한글 쓰기를 두려워하시는 할머니에 통화가 안 되는 아이의 아빠, 등록 없이 아동센터에서 아이를 받고는 있었지만 방법을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모시고 풍암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시원한 물과 친절한 상담으로 할머니를 맞이했고, 의료보험금 확인서가 없어서 아동센터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을

말씀 드렸더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주민센터라고 하며 서류를 팩스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풍암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가정사를 듣고 국민기초수급절차를 밟아 주신다고 하셨다.

이 아이가 바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다.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가끔 할머니담을 찾는 아빠는 아이와 놀아 주기보다 생계를 위해 새벽같이 공사장으로 출근을 한다고 한다.

할머니는 아들이 건넌 작은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손자를 키워왔다. 계절에 맞는 옷이나 신발은 사치품이고 맛있는 간식이나 용돈은 상상할 수 없다. 한부모 가정이지만 한부모 신청이 되어있지 않고, 원룸에서 어렵게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지만 국민기초수급자 등록이 안 돼 있었다. 공부할 재기는 가정의 보호자도 없었다.

지금 이 아이의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수학은 5미만의 수를 계산하고 한글공부에 받아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지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단지 돌봄을 받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아픔이다. 아이의 장애희망은 경찰이다. 멋 있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뜻을 가진 아이이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학교 앞에 서계시면 외면하고 도망간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냐"며 할머니께 따지며 "학교 앞에 나와 있지 말고"고 하며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이 아이는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운 것이다. 할머니가 대신하는 엄마역할이 아닌 진짜 엄마 말이다.

그런데 강 교감 선생님은 이 아이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실제 아들처럼 손자처럼 챙겨주셨다. 강 교감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동센터에 오게 되었고, 아동센터에서는 주민센터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아이를 상담했고, 주민센터에서는 이 아이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학교가 나서고 지역아동센터가 나서고 주민센터가 나서고... 따뜻한 마을의 연결고리는 사랑을 싣고 온 마을을 돌아 부대끼며 그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각자의 역할이고 한 아이를 키우려는 온 마을의 정성어린 숨결이다.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아동센터를 찾은 이 아이를 보며 머릿속에 작은 미소를 보낼 것이다.

無等鼓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때는 바둑 영재였지만 프로 기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기적처럼 종합상사 인턴사원으로 취업했지만 직장 생활은 고단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장그래는 검정고시 출신의 험난한 사회생활을 보여 준다. 고교 학맥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동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탓에 검정고시 출신들의 성공에는 각고의 노

검정고시

다. "선배 어디 나왔어요" "검정고시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녀의 질문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내년부터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해마다 1만 명에 달하자 교육부가 검정고시 외에 직업훈련 등을 이수해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정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검정고시가 65년 만에 어쩌면 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인강 스피리 휴먼스토리만은 계속되었으면 한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